

## 광역의회의 여성 정치대표성과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강예은\*\* · 황아란\*\*\*

### | 목차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가설 및 분석자료
4. 분석 결과
5. 결론

### | 초록 |

한국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중 광역의회의 여성 대표성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는 정당의 역할에 주목하고 2014년 광역의원선거를 대상으로 어떤 변수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당선경쟁력의 성차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험적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녀후보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이 아닌 소속정당과 지역주의, 현직 여부와 같은 정치배경 변인들이었다. 결론에서는 광역의회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후보의 당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당의 공천전략을 시사점으로 논의했다.

**주제어** : 여성대표성, 지방의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당선경쟁력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와 정보운영과에 감사드린다.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eslk2@naver.com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ahwang@pusan.ac.kr

## 1. 서론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여성할당제를 비롯한 여성 정치발전비,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등 여성의 저대표성 해결을 위한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였지만 효과는 미약했다. 이러한 제도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영역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권력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의 저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연구에 집중했지만, 여성대표성이 높은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강제하는 할당제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여성 할당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공정한 대표성에 대한 합의와 올바른 제도를 실천하려는 정당의 의지라 하겠다(신기영·황아란, 2017).

이 연구는 한국의 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여성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광역의회의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에 주목하여 여성후보의 당선이 광역의원 선거에서 왜 그리 적은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의 여성당선자는 2006년까지 5%를 넘지 못했고, 최근 2010년, 2014년 선거에서도 8% 수준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동시실시의 기초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이 2010년 10.9%에서 2014년 14.7%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선거구제가 다른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2010년부터 도입된 지역구 여성의무할당제에 대한 정당의 공천전략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황아란, 2015). 즉 정당이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 정수의 1/2 이상을 공천할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마다 적어도 1명 이상 여성을 반드시 공천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47조 5항, 제52조 2항)에 대하여, 정당들은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공천 전략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광역의원선거보다 여러 명을 뽑는 기초의원선거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선

호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에 대한 국내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지방의회선거에 대한 분석은 소홀한 편이었다. 최근 연구들은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이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후보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의 공천에서 드러나는 성차에 기인한 문제라 주장한다(황아란, 2002, 2006; 권수현·황아란, 2017). 이에 본 논문은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후보보다 낮지 않다는 기본 가설을 세우고 2014년 광역의원선거의 여성 당선경쟁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와 남성후보의 당선율 차이는 역대 가장 큰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보다 낮지 않다는 이 연구의 가설이 검증된다면, 한국에서 가장 낮은 여성대표성을 보이는 광역의회 구성은 여성후보 개인의 문제보다 제도적인 혹은 정당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정당들이 남녀 후보를 어디에 공천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정당의 공천전략 차원에서 살피는 것은 정당공천이 여성대표성에 어떤 함의를 제시하는가를 논의하는데 중요하다.

## 2. 이론적 논의

###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왜 중요한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불균형한 성비가 특징이다. 의회의 구성이 한 성(性)에 의해 압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와 이해가 입법과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다. ‘좋은 대표성’은 피대표자와 대표자 사이의 연속성 안에서 존재한다는 주장(Celis, 2008: 80)은 의회의 대표성이 사회구성을 얼마나 비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구경제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자의 존재가 의회에 있어야 다양한 이익을 주창하는 대표성의 핵심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여성의원인 입법과정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 혹은 여성 관련 법안발의에 남성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김원홍 외, 2007, 2016; 김은경, 2010; 김민정, 2014). 차일드와 로벤듀스키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또는 대표성의 성균형이 ‘보다 나은 대표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주장한다(Childs and Lovenduski, 2013: 506; 이진옥 외, 2017: 2에서 재인용).

물론 여성대표성의 개념은 “여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성의 이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대표성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느냐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구분점이 된다(김은희, 2017). 그 점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선출된 여성의 수와 의석점유율을 의미하는 수적인 대표성과 여성정치세력화를 의미하는 실질적 대표성으로 나뉜다(김민정, 2014).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성 이론은 의회가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거울처럼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Pitkin, 1967). 그러한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대표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념을 대표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사실 단순히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성들이 참여하고 누구를 대표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이혜숙, 2016).

그러나 정치적 소수자와 여성의 대표성을 논의하는 이론가들은 이러한 대표성 이론에 맞서며, 여성을 비롯한 권력소수집단이 자신의 대표를 직

접 의회에 보내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체제 내에서 집단의 정치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신기영·황아란, 2017: 33-34). 예를 들어 영(Young, 1990)의 '집단대표성(group representation)' 논의는 권력소수집단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려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로 소수집단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와 공적 자원 분배를 제안하였다. 필립스(Phillips, 1995)도 소수집단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참석의 정치(politics of presence)'로 이론화하며, 소수집단 구성원이 당사자로서 정치과정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기술적 대표성의 보장이 그 집단의 존재가치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그들의 간과되거나 잠재된 이해를 의제에 포함시켜 정책화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의 의회 대표성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여성 의원의 증가가 여성의 이해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조건이라 보았다(Phillips, 1995: 84). 맨스브리지(Mansbridge, 1999)는 소수집단의 기술적 대표성 확보가 속의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대표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더하여, 실질적 대표성과 무관하게 소수집단의 상징적 대표성과 민주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기술적 대표성에 대한 규범적인 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여성대표성 증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될 수 있으며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한데, 여성대표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임계량(critical mass) 개념이다(Dahlerup, 1988). 소수집단이 그들이 속해있는 전체집단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최소한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물학 이론을 정치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199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여성할당제는 이 개념에 기반을 두었고, 많은 국가들이 여성할당제의 최소 목표치를 30%로 설정했다(신기영, 황아란, 2017).

여성운동은 여성의원 30%의 확보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와 실질적인 정책변화 사이에 보다 복합적인 관계가 있으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는데(Childs and Krook, 2009), 이는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정적 행위자(critical actor)임을 강조한 것이다.

## 2) 여성의 정치적 저(低)대표성의 원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크게 사회문화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전통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해석한다. 즉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보수적인 문화와 관습이 여성의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다(Lawless and Fox, 2005). 한편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경제학적 접근은 공급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과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Norris and Lovenduski, 1995). 즉 정치진입에 필요한 돈, 시간, 경험이나 정치적 야망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제도주의 접근은 특히 선거구제와 여성할당제 등 선거제도에 주목하여 국가 간 여성대표성의 차이를 설명한다(David Farrell, 2001). 즉 소선거구 단수다수제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불리한 반면 비례대표제가 가장 유리한 제도이며, 여성할당제의 도입여부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가장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손혜현, 2009; 조희원, 2011; 권수현·황아란, 2017).

이러한 접근들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보완적인 관계로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행위자 요인으로 정당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거경쟁의 핵심주체인 정당은 공천에 의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 또는 확대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의 공천이 후보의 당선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후보에게 주요 정당의 공천은 더 중요할 수 있다(황아란, 2002; 정다빈 외, 2017). 즉 여성의원의 수가 적은 것은 주요 정당이 공천한 여성후보의 수가 적은 데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권력추구가 목적인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정당의 공천은 선거경쟁의 승리를 통해 정치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이는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데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성후보 공천이 적은 것은 남성보다 당선경쟁력이 낮기 때문인가? 최근의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즉 제13대 총선부터 제16대 총선까지 지역구선거에서 남녀 후보의 당선경쟁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황아란, 2002), 최근 20대 총선에 대한 분석도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후보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권수현·황아란, 2017). 지방선거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역시 역대 서울시의원선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별요인의 영향력은 규명되지 않았다(정다빈 외, 2017).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의 주요 요인이 여성후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정당공천의 차별에서 비롯된 문제로, 공천 과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박경미, 2012; 유성진, 2012; 황아란·서복경, 2011). 즉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정당 내 고위 당직자들의 대다수인 남성이 여성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의경, 2010; 엄태석, 2011).

### 3) 한국의 지방의회와 여성 정치대표성

민주화 이후 재개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의 단체장을 포함한 동시실시의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선거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위한 많은 제도

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황아란·서복경, 2011). 1995년 광역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10%)가 도입되었고, 1998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출에서는 정당의 자율적인 30% 여성할당제 공천이 시행되었다. 특히 2002년 광역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인2표제의 비례대표 정당명부 투표와 50%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에도 여성후보 30% 정당공천이 권고규정으로 법제화되고 이를 준수한 정당에게 정치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확대와 함께 광역과 기초의원선거 모두 비례대표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정당명부의 등록무효가 광역의원선거에 그리고 2010년에는 기초의원선거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 강화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2010년 지역구 지방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정당공천의 여성할당제는 권고규정이 아닌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김민정, 2014; 황아란, 2014; 강원택, 2016).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여성대표성은 기초의회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14.3%)가 기초의회(25.3%)보다 훨씬 적으며, 또 최근 2016년 제20대 국회의 여성의원(17%)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sup>1)</sup> 동시 실시의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기초의원선거보다 낮은 광역의원 선거의 여성 대표성은 선거구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소선거구가 적용되는 총선과 비교하여 광역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다는 점은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가 광역의

1)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도 광역의회(8%)가 기초의회(15%)보다 낮고 제20대 총선(10%)과 비교해도 낮다.

원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광역의회의 낮은 여성 대표성은 <표 1>의 지역구의원선거를 살펴볼 때 더 잘 드러난다. 광역의회의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4년 8.2%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구 광역의원 여성비율은 2006년까지 5%도 되지 않았고, 2010년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 도입에도 3%p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다.<sup>2)</sup> 흥미로운 점은 여성후보의 비율이 2010년(8.7%)보다 2014년(11.5%) 증가했으나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단 0.1%p밖에 늘지 않은 점이다. 특히 여성후보의 당선율(29.3%)은 남성(42.5%)보다 크게 떨어져 역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표 1> 역대 광역의원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후보자(명)			당선자(명)			당선율(%)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여성	남성	차이 (%p)
제1회 (1995년)	2,439	39	(1.6)	875	13	(1.5)	33.3	35.9	2.6
제2회 (1998년)	1,567	37	(2.3)	616	14	(2.3)	37.8	39.3	1.5
제3회 (2002년)	1,528	48	(3.1)	609	14	(2.3)	29.2	40.2	11.0
제4회 (2006년)	2,062	107	(5.1)	655	32	(4.8)	29.9	31.9	2.0
제5회 (2010년)	1,764	154	(8.7)	680	55	(8.1)	35.7	38.8	3.1
제6회 (2014년)	1,719	198	(11.5)	705	58	(8.2)	29.3	42.5	13.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지방선거의 특수한 시기적인 요인이 여성후보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일 수 있다. 무엇보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침울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여야 정당 모두 공

2) 그에 비해 기초의회 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은 2006년 4.4%에서 2010년 10.9%, 2014년 14.7%로 증가폭이 더 컸다.

천을 연기하는 등 선거열기가 매우 낮았고 선거운동도 매우 위축되어 조용하게 선거가 치러졌다. 이는 특히 여성 등 인지도가 낮은 신인후보들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환경으로 작용하여 유권자가 후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으며, 기초의원선거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역의원선거에서 그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군소정당의 몰락과 함께 주요 정당 후보의 당선율이 증가하고 현직의 재선율이 급증한 2014년 지방선거의 특징은 신인후보에 대한 인지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말해준다(황아란, 2016).

그러나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의 증가에도 여성의원 비율이 늘지 않았다거나 여성후보의 당선율이 감소하여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만으로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지방선거 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통제하고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연구 가설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는 기본가설을 설정하고 당락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당선경쟁력의 측정도구로 당락을 선정한 것은 선거에서 당선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가 당선 여성의원의 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성후보와 남성후보 간의 당선경쟁력에 성차가 없다는 이 연구의 가설이 검증된다면, 성별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 또 만일 성별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사이에 성차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대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차에 대한 이 연구의 가설검증은 당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될 것이다.

첫째, 후보의 소속정당이다. 특히 군소정당의 몰락 현상을 가져온 2014년 지방선거의 특징을 고려할 때(황아란, 2015),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보다 당선경쟁력이 훨씬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이나 도시유형도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즉 정치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덜 보수적이고 개방적인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도시가 농촌보다 여성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일 수 있기 때문이다(황아란, 2002; 박지영·조정래, 2016; 권수현·황아란, 2017). 셋째, 한국의 모든 선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의 정당지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새누리당에 대한 영남지역의 지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지역의 지지는 당선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으로, 이는 특히 여성후보에 대한 양대 정당의 공천이 어떤 지역에서 어느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끝으로 현직의 후보 요인을 포함한다. 현직 후보가 비현직 후보보다 당선경쟁력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 문헌을 통해 여러 차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황아란, 1998, 2013, 2015; 이갑윤·이현우, 2000; 이근수·김영중, 2010). 특히 2014년 지방선거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현직의 재선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당선경쟁력의 영향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2014년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결과의 후보자 집합데이터다. 분석방법은 먼저 기초분석으로 후보의 소속정당, 지역, 도시유형, 현직여부의 선거구유형 등에 따라 여성 후보의 출마현황을 남성후보와 비교하는 한편, 당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종합분석은 로짓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당락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을 제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검증할 것이다.

#### 4. 분석결과

##### 1) 기초분석

###### (1) 정당별 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2014년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1719명으로, 소속정당은 새누리당 595명(34.6%), 새정치민주연합 538명(31.3%), 그리고 무소속을 포함한 기타 정당은 586명(34.1%)이다.<sup>3)</sup> 성별분포는 여성 198명(11.5%), 남성 1521명(88.5%)이다. <표 2>의 정당별 여성분포를 살펴보면, 여성후보 비율은 새누리당 7.7%, 새정치민주연합 12.5%, 군소정당/무소속 14.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새누리당이 여성후보 공천에 매우 보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참고로 군소정당의 여성 공천은 통합진보당(31.6%), 노동당(32.4%) 등 적극적인 것인 양상을 보였으나 무소속은 5.7%에 불과하였다. 주시할 점은 총 198명 여성후보 가운데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경우는 57.1%로, 이는 남성후보의 67.1%보다 적다는 점이다.

<표 2> 정당별 남녀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단위: %, 명)

구분		전체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군소정당/ 무소속	통계량( $X^2$ )
후보자	여	11.5 (198)	7.7 (46)	12.5 (67)	14.5 (85)	14.0 p < .01
	남	88.5 (1521)	92.3 (549)	87.6 (471)	85.5 (501)	
당선자	여	29.3 (58)	54.4 (25)	49.3 (33)	0.0 (0)	452.2 P < .01
	남	42.5 (647)	63.8 (350)	58.6 (276)	4.2 (21)	

주: 괄호 안은 후보자 및 당선자 수

3) 통합진보당(114명), 정의당(12명), 노동당(68명), 녹색당(3명), 새정치당(5명), 무소속 후보(384명) 중 여성은 각각 36명, 2명, 22명, 1명, 2명, 22명이었다.

당선자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는 63.0%가 당선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57.4%, 그리고 군소정당 및 무소속은 3.6%만이 당선되어 정당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X^2=518.5$ ,  $p<.01$ ). 이러한 양상은 <표 2>에서 성별을 통제하고 비교해도 동일한데, 여성후보의 경우 당선율은 새누리당(54.4%)이 새정치민주연합(49.3%)보다 높고, 군소정당/무소속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남성후보의 경우도 새누리당(63.8%), 새정치민주연합(58.6%), 군소정당/무소속(4.2%) 순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남녀후보의 당선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여성은 29.3%(58명)가 당선된 데 비해, 남성은 42.5%(647명)로, 이러한 성차(13.2%p)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X^2=12.7$ ,  $p<.01$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소속 정당을 통제하고 당선율의 성차를 분석하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남녀 후보 간의 당선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무소속을 포함한 군소정당의 경우 여성후보는 85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의 당선자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여 남성후보는 21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곧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매우 취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2014년 광역의원선거는 양대 정당의 당선율이 군소정당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는 성별을 통제하고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목할 점은 전체적으로 여성후보의 당선율이 남성보다 낮지만, 소속정당을 통제하고 비교하면 양대 정당의 경우 당선율의 성차를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주시할 점은 당선율이 가장 높았던 새누리당의 여성후보 공천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과 군소정당의 경우 여성 공천율은 높았지만 모두 낙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주요 정당의 공천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당선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나타낸다.

(2) 지역별 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표 3〉은 지역별 남녀후보 비율과 당선율을 보여준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여성후보 비율이 14.8%로 가장 높으며, 영남 10.4%, 호남 10.2%, 그리고 강원, 충청, 제주 등 기타지역 8.6%로,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여성후보의 출마율이 높은 현상은 여성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임을 말해준다. 이는 당선자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 당선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탄생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지역별 남녀후보 비율과 당선율

(단위: %, 명)

구분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통계량( $X^2$ )
후보자	여	14.8 (92)	10.4 (45)	10.2 (25)	8.6 (36)	11.1 p < .05
	남	85.2 (529)	89.6 (389)	89.8 (221)	91.4 (382)	
당선자	여	31.5 (29)	28.9 (13)	28.0 (7)	25.0 (9)	n.s
	남	40.5 (214)	46.0 (179)	44.3 (98)	40.8 (156)	n.s

주: 괄호 안은 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여성후보의 당선율 역시 수도권(31.5%)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남(28.9%), 호남(28%), 그리고 기타지역(25%)이 가장 낮았다. 그에 비해 남성의 당선율은 수도권(40.5%)에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기타지역(40.8%), 그리고 호남(44.3%)과 영남(46%) 순을 나타낸다. 다만 남성이나 여성 모두 지역 간 당선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 남녀후보의 당선율 차이는 수도권(9%p)에서 가장 적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던 점이다. 그에 비해 영남지역의 당선율 성차(17.1%p)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반면(p < .05), 호남지역의 성차(16.3%p)는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타지역의 성차(15.8%p)는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지만 유의하였다(p < .1).

종합하면, 여성후보의 비율이나 당선율이 남성보다 낮은 현상은 모든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지만, 수도권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이 높고 당선율도 높았던 것은 그리고 당선율의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점은 여성의 정치활동에 덜 보수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강한 영남과 호남의 경우 당선율의 성차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정당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 주요 정당의 지역별 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표 4〉는 주요 정당의 지역별 남녀후보 비율과 당선율을 보여준다. 먼저 지역별 여성후보의 비율은 양대 정당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높고 지지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 지역별 주요 정당의 남녀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단위: %, 명)

구분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통계량( $X^2$ )
후보자	새누리당	여	9.1 (22)	6.8 (13)	-	6.8 (11)	n.s
		남	90.9 (220)	93.2 (178)	-	93.2 (151)	
	새정치 민주연합	여	17.3 (40)	15.1 (8)	6.7 (7)	8.1 (12)	11.2 p<.05
		남	82.7 (191)	84.9 (45)	93.3 (98)	92.0 (137)	
당선자	새누리당	여	31.8 (7)	100.0 (13)	-	45.5 (5)	15.8 p<.01
		남	37.3 (82)	95.5 (170)	-	64.9 (98)	144.5 p<.01
	새정치 민주연합	여	55.0 (22)	0.0 (0)	100.0 (7)	33.3 (4)	16.7 p<.01
		남	69.1 (132)	0.0 (0)	93.9 (92)	38.0 (52)	146.7 p<.01

주: 괄호 안은 후보자 및 당선자 수

새누리당 여성후보 비율은 수도권(9.1%)이 영남(6.8%)이나 기타 지역(6.8%)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참고로 호남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후보 비율은 수도권(17.3%), 영남(15.1%), 기타지역(8.1%), 호남(6.7%) 순으로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sup>4)</sup> 이러한 특징은 양대 정당이 공천한 여성후보의 지역별 분포에서 잘 나타난다. 새누리당 여성후보(46명)는 절반가량이 수도권(22명, 47.8%)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여성후보(67명)는 그보다 많이 수도권(40명, 59.7%)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지역별 주요 정당의 남녀 당선율을 살펴보면,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영향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후보는 영남에서 공천한 13명 모두 당선되었고(100%), 기타지역(45.5%), 수도권(31.8%) 순이며, 남성후보도 영남(95.5%), 기타지역(64.9%), 수도권(37.3%)으로, 남녀 모두 지역 간 당선율 차이가 뚜렷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여성의 당선율은 호남(100%), 수도권(55.0%), 기타(33.3%), 영남(0%)이며, 남성도 호남(93.9%), 수도권(69.1%), 기타(38.0%), 영남(0%)으로, 남녀 모두 이러한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종합하면 광역의원선거에 미친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위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의 지지지역에서 나타낸 높은 당선율에서 확인된다. 이는 또 새누리당이 호남에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던 점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점에서 배타적 지역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양대 정당 모두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높은, 즉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 공천이 가장 낮았던 점이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여성후보들이 각각의 지지지역에서 100% 당선율을 보였다는 점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이 여성에게 소극적인 공천의 문제에 귀결됨을 보여준다.

4) 참고로 무소속을 포함한 군소정당도 여성후보 비율은 수도권(20.3%)이 영남(12.6%)이나 호남(12.8%), 기타지역(12.2%)보다 높았다.

**(4) 도시유형별 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표 5〉는 도시유형을 크게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남녀 후보의 출마율과 당선율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여성후보의 비율은 광역시(14.8%)가 도(9.3%)보다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또 여성후보(198명)들은 광역시에 더 많이 출마(51.5%)한 반면, 남성후보(1521명)는 도에 더 많았던 점(61.3%)이 대비된다. 참고로 새누리당이 광역시에 공천한 여성후보 비율(7.3%, 18명)은 도(8%, 28명)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시(17.7%, 37명)가 도(9.1%, 30명)보다 훨씬 많은 특징을 보였다( $X^2=8.6, p<.01$ ). 무소속을 포함한 군소정당 역시 광역시에서 여성후보 비율(20%, 47명)이 도(10.8%, 38명)보다 높았다( $X^2=9.6, p<.01$ ).

〈표 5〉 시도 간 남녀후보의 출마율 및 당선율

(단위: %, 명)

구분		광역시	도	통계량( $X^2$ )
후보자	여	14.8 (102)	9.3 (96)	12.1 $p < .01$
	남	85.2 (588)	90.7 (933)	
당선자	여	31.4 (32)	27.1 (26)	n.s
	남	39.8 (234)	44.3 (413)	2.9 $p < .1$

주: 괄호 안은 후보자 및 당선자 수

한편, 여성후보의 당선율은 광역시(31.4%)가 도(27.1%)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당선율은 광역시(39.8%)보다 도(44.3%)에서 높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다소 낮지만 차이를 보였다( $p<.1$ ). 주목할 점은 광역시에서 여성과 남성의 당선율 차이(8.4%p)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도에서는 여성보다 높은 남성의 당선율 차이(14.2%p)가 유의하였던 점이다( $X^2=10.5, p<.01$ ). 참고로

광역시에서 새누리당이 공천한 여성후보의 당선율(61.1%, 11명)은 남성(57.5%, 131명)보다 높았던 것과 대비하여, 도에서의 여성 당선율(50%, 14명)은 남성(68.2%, 219명)보다 낮았다( $X^2=3.9$ ,  $p<.05$ ). 새정치민주연합도 광역시에서 여성의 당선율(56.8%, 21명)이 남성(59.3%, 102명)과 큰 차이가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도에서는 여성 당선율(40%, 12명)이 남성(58.2%, 174명)보다 낮았다( $X^2=3.7$ ,  $p<.1$ ).

종합하면, 광역시의회 지역구 의원정수(266명)가 도의회(439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후보들이 광역시에 출마가 더 많았던 것은 대도시의 정치문화적인 개방성이 도보다 덜 보수적인 환경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여성의 당선율이 도보다 광역시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낸 점과 특히 당선율의 성차가 광역시에서 훨씬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현직여부의 출마유형별 후보 출마율 및 당선율

〈표 6〉의 현직여부의 출마유형별 후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현직의원이 재출마한 선거구에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그리고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경쟁선거구(open seat)의 후보(이하 경쟁후보)로 나누었다. 이를 살펴보면, 현직후보 369명, 도전후보 518명, 경쟁후보 832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현직후보(8.7%)가 도전후보(12.4%)와 경쟁후보(12.3%)보다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주목할 점은 현직의원의 재출마율이 높지 않다는 점인데, 2010년 선거에 당선된 지역구 광역의원(680명) 중 54.3%만이 재출마하였으며, 성별로 나누면 여성의원(55명)의 58.2%, 남성의원(625명)의 53.9%가 2014년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이러한 낮은 현직의 재출마율은 광역의회의 의원교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의정의 연속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6〉 정당별 남녀후보의 현직효과

(단위: %, 명)

구분	현직선거구		경쟁선거구 후보	통계량( $\chi^2$ )	
	현직후보	도전후보			
후보자	전체	21.5 (369)	30.1 (518)	48.4 (832)	n.s
	여	8.7 (32)	12.4 (64)	12.3 (102)	
	남	91.3 (337)	87.6 (454)	87.7 (730)	
당선자	전체	75.3 (278)	17.2 (89)	40.6 (338)	301.4 p < .01
	여	56.3 (18)	9.4 (6)	33.3 (34)	24.3 p < .01
	남	77.2 (260)	18.3 (83)	41.6 (304)	274.7 p < .01

주: 괄호 안은 후보자 및 당선자 수

참고로 정당별 현직여부의 출마유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현직후보 135명, 도전후보 184명, 경쟁후보 276명이며, 여성 분포는 현직후보의 5.2%(7명), 도전후보의 8.7%(16명), 경쟁후보의 8.3%(23명)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직후보(189명)가 많은 대신 도전후보(101명)가 적은 경향을 보이며, 경쟁후보는 248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비율은 모든 유형에서 새누리당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현직후보의 8.5%(16명), 도전후보의 14.9%(15명), 경쟁후보의 14.5%(36명)를 차지했다. 무소속/군소정당은 현직후보 45명, 도전후보 233명, 경쟁후보 308명이며, 여성은 현직후보의 20%(9명), 도전후보의 14.2%(33명), 경쟁후보의 14%(43명)였다.

현직의 효과는 당선율에서 잘 확인된다. 예상대로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 당선율(75.3%)이 가장 높고 도전후보가 가장 낮으며(17.2%),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경쟁후보(40.6%)가 그 사이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도 동일하다. 여성의 경우 현직후보의 당선율(56.3%)은 도전후보(9.4%)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경쟁후보

(33.3%)보다 높았다. 남성의 당선율도 현직후보(77.2%)가 도전후보(18.3%)보다 훨씬 높았고, 경쟁후보(41.6%)보다 높았다. 또 당선율의 성차를 살펴보면, 현직후보는 남성 당선율이 여성보다 높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 비해( $X^2=6.9, p<.01$ ),<sup>5)</sup> 도전후보의 성차는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고( $X^2=3.1, p<.1$ ), 경쟁후보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고로 현직효과는 정당별로 살필 때도 뚜렷하다. 새누리당 현직후보의 당선율(89.6%)은 경쟁후보(71.4%)보다 높고 도전후보(31.0%)가 가장 낮으며( $X^2=130.4, p<.01$ ),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율 역시 현직후보(79.4%), 도전후보(25.7%), 경쟁후보(53.6%)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X^2=80.1, p<.01$ ). 군소정당/무소속도 당선율은 현직후보(15.6%)가 도전후보(2.6%)나 경쟁후보(2.6%)보다 높았다( $X^2=20.2, p<.01$ ).

종합하면, 광역의원선거에서 현직의원의 재출마율은 남녀 모두 그리 높지 않지만, 현직후보가 높은 경쟁력을 지닌다는 점은 뚜렷하다. 이는 전체 후보뿐 아니라 성별이나 정당을 통제하고 살필 때도 당선율의 명확한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다만 현직의 이점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낮게 나타난 점은 주요 정당이 아닌 무소속 및 군소정당의 여성후보들이 현직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낙선하였기 때문으로, 당선경쟁력의 성차와 현직효과에 대한 검증은 소속정당 등을 통제한 종합모형에서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 2) 종합분석

다음은 남녀 후보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삼고, 독립변수로는 성별을 포함하여 앞서 기초분석에서 살핀 소속정당, 지역, 지역주의, 도시유형, 현직여부의 출마유형,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후보수와 학력·연령·재산 등 인구경제학적 요인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

5) 그러나 이는 무소속 및 군소정당의 경우 여성 현직후보(9명)가 모두 낙선한 데 비해 남성 현직후보(36명)는 7명이 당선된 것에 기인한다.

들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경제학적 변인으로 성별은 여성을 1로, 남성을 0으로 코딩하였다. 학력은 무학(1)부터 대학원졸(6)까지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로, 재산은 천 만 원 단위의 연속 변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정치적 변인으로 소속정당은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기준 범주로 삼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두 개의 가변수로 조작하였다. 지역주의의 영향은 새누리당이 영남에 공천한 경우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 공천한 경우에 1로, 그 밖의 경우는 0으로 조작하였다. 현직의 효과는 현직여부의 출마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현직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경쟁후보를 기준 범주로 삼아 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를 두 개의 가변수로 조작하였다.

끝으로 선거구환경의 통제변인으로 지역은 수도권과 영남, 영남을 세 개의 가변수로 설정하고 충청, 강원, 제주를 기준 범주로 삼았다. 도시유형은 광역시는 1, 도는 0으로 조작했으며, 후보 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제 요인을 통제한 가운데 당락에 성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증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형(1)과 양대 정당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형(2)으로 나누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형(2)의 분석에서 소속정당은 새누리당=1, 새정치민주연합=0으로 조작하였으며, 예비분석 결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모형의 적정성을 위협하는 지역주의 변수는 모형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표 7>의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경제학적 변인 중에는 학력만이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의할 뿐( $p < .1$ ), 성별을 포함한 연령, 재산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다. 특히 제 요인을 통제할 때 성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점은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해 주는 중요한 발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7〉 제6회 지방선거의 당락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1 (전체)			모형2 (양대 정당)		
		회귀계수	(표준 오차)	확률비	회귀계수	(표준 오차)	확률비
인구 경제 변인	여성	-0.31	(0.23)	0.74	-0.18	(0.23)	0.83
	학력	0.16*	(0.08)	1.18	0.17*	(0.09)	1.18
	연령	-0.00	(0.01)	1.00	-0.007	(0.01)	0.99
	재산	0.00	(0.00)	1.00	0.00	(0.00)	1.00
정치 변인	새누리당	2.78***	(0.30)	16.16	0.95***	(0.16)	2.58
	새정치민주연합	2.46***	(0.28)	11.72			
	지역주의	3.90***	(0.42)	49.18			
	현직후보	1.25***	(0.19)	3.48	1.38***	(0.19)	3.97
	도전후보	-1.09***	(0.17)	0.34	-1.37***	(0.17)	0.25
선거구 환경 변인	후보수	-0.09	(0.09)	0.91	-0.02	(0.09)	0.98
	광역시	-0.09	(0.15)	0.92	-0.05	(0.15)	0.96
	수도권	-0.003	(0.16)	1.00	0.09	(0.17)	1.09
	영남	-1.33***	(0.35)	0.26	0.84***	(0.22)	2.31
	호남	-0.72	(0.47)	0.49	3.14***	(0.46)	23.0
	상수	-3.12***	(0.80)		-0.81	(0.79)	
통계량	사례수	1,719명			1,133명		
	-2Log L	2,327.192			1521.574		
	우도비 $X^2$	1060.8402***			329.7362***		
	적중률	91.1			81.1		

\*\*\* p &lt; .01, \*\* p &lt; .05, \* p &lt; .1

그에 비해 정치적 배경 변인들은 모두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속정당은 무소속/군소정당에 비하여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확률이 약 16배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약 12배가 높았다. 지역주의 영향 역시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남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와 호남지역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당선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49배나 높았다. 또 현직효과의 영향은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 비하여 당선확률이 현직

후보는 3.5배 높으며, 도전후보는 0.3배, 즉 3.3배 낮은 데서 잘 나타난다. 끝으로 선거구환경 변인 중에는 출마지역으로 영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후보 수나 도시유형은 제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다.

한편 <표 7>의 양대 정당 모형(2)의 분석결과는 전체 모형(1)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당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과 소속정당, 현직효과, 지역이다. 즉 양대 정당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도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가설을 검증해 준다.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새누리당의 당선확률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지방선거가 여당에게 유리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1998년 지방선거와 유사하게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았던 임기초반에 치러졌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제1야당의 반사이익이 적었음을 보여준다(이현우, 2015). 현직효과 역시 양대 정당에서도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와 비교하여 현직후보의 당선확률이 4.0배 높으며,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와는 0.25배, 즉 4.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강원, 충청, 제주와 비교하여 영남에 출마한 후보의 당선확률이 2.3배, 호남에 출마한 후보가 23배 높다. 이는 전체 모형(1)과 달리 지역주의 변수를 제외한 양대 정당 모형(2)에서 배타적 지역주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새누리당은 호남에 공천을 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영남에 소극적인 공천을 하여 각 정당의 지지지역인 영남, 특히 호남에서 당선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당락에서 성차는 전체 모형(1)뿐 아니라 양대 정당 모형(2) 분석에서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광역의원선거에 성별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광역의회의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정당공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광역의원선거에서 후보의 당선경쟁력은 성별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속하는 정당과 현직 효과, 지역주의의 영향이다. 특히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당락에 압도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그만큼 광역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주시할 점은 현직의 후보요인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된 점이다. 문제는 여성의원인 적다는 점과 남녀 모두 현직 의원의 재출마율이 낮다는 점인데, 이는 지방의회의 교체율이 높아 의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란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대표의 실패’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큰 결함이란 점에서 한국의 낮은 여성 정치대표성은 개선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역대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정치진입에 성공한 후보의 대부분 남성이었다. 특히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란 점은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지방의회 대표기능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 논문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수준을 좌우하는 주요 행위자로 정당에 주목하여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의 공천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광역의원선거에서 성별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규명되었다. 단순히 여성 후보의 당선율을 남성후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게 나타나지만, 정당 등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면 남녀 후보 간에 당선경쟁력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역의원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은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 현직 여부 등 정치적 배경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정당의 영향은 남녀 후보 모두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서 당선경쟁력은 새누리

당, 새정치민주연합, 군소정당/무소속 순으로 정당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은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는데, 당선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새누리당의 여성후보 공천은 가장 저조하였고, 한 명의 여성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군소정당/무소속의 여성후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여성의 저대표성에 주요 원인이 여성후보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 차별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여성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천을 유인할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지역주의 정당지지 역시 남녀 후보에 상관없이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시한 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지역주의 정당지지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남과 호남에 여성후보를 매우 적게 공천하였다는 점이다. 이 또한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의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후보들은 각 정당의 지지지역에서 100% 당선되는 성과를 나타냈지만, 공천 받은 여성후보가 소수여서 지방의회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광역의원선거에 미치는 현직효과의 영향은 현직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보다 높으며, 현직후보에 맞서 도전한 후보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직효과는 남녀 후보 모두에 적용되는 현상으로, 현직의 이점이 당선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원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현직후보의 여성 비율도 낮을 수 밖에 없지만, 군소정당/무소속과 비교하여 주요 정당들이 공천한 현직후보의 여성비율이 더 낮았던 점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에 소극적인 정당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서 성별이 당락의 주요 결정요인이 아니며, 정당 등 정치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광역의회의 낮은 여성대표성의 원인이 유권자나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공천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정당의 공천에서 찾아야 하며, 특히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천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요 정당의 적극적인 여성 공천이다. 우선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보다 낮지 않다는 발견은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차별을 시정해야 할 중요한 경험적 증거이며, 이는 광역의회의 여성 대표성이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의 인식 전환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특히 주요 정당들이 선도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높은 영남과 호남에 보다 적극적인 여성후보 공천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시킨다면 전국적으로 성균형 의회를 실현하는 데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또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당선경쟁력이 비수도권이나 도에 출마한 경우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남성후보와 비교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은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효과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끝으로 현직효과를 고려할 때 현직 여성의원에 대한 주요 정당의 재공천은 광역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여성의원이 매우 적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인후보를 공천할 때 현직이 출마한 선거구보다는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에 여성후보를 적극 공천하는 것이 여성의 당선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2014년 광역의원선거에 국한된 분석이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가장 낮고 여성후보의 당선율도 큰 폭으로 떨어진 선거임에도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보다 낮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축적된 자료의 통시적인 분석과 함께 공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병행되길 바라며, 나아가 선거구제를 달리하는 동시실시의 기초의원선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Ⅰ

- 강원택. 2016. 『지방정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권수현·황아란. 2017.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2호. 69-92쪽.
- 김민정. 2014.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제2호. 203-241쪽.
- 김원홍·김은경·김복태·전선영·김은주. 2016.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27-54쪽.
- 김은경. 2010. “연구논문: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30권. 101-136쪽.
- 김은희. 2017.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33-68쪽.
- 박경미. 2012. “여성할당제의 적용 요인 연구: 제19대 총선의 여성 지역구 후보의 정당 공천.” 『의정연구』. 제37권. 73-103쪽.
- 박의경. 2010. “지방자치 20년: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제1호. 197-224쪽.
- 박지영·조정래. 2016.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지방 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205-238쪽.
- 손혜현. 2009.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9권 제1호. 353-373쪽.
- 신기영·황아란. 2017.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4호. 27-57쪽.
- 엄태석. 2011. “충북지역 여성 지방의원의 정치참여와 의정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정치 정보연구』. 제14권 제2호. 227-259쪽.
- 유성진. 2012. “19대 총선과 여성 대표성: 후보공천방식과 여성대표성 증진.” 『동서연구』. 제24권 제3호. 207-229쪽.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149-170쪽.

- 이근수·김영중. 2010.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355-371쪽.
- 이진옥·황아란·권수현. 2017.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한국여성학』, 제33권 제4호, 209-246쪽.
- 이혜숙. 2016. “지방선거 여성후보자의 성격과 선거과정- 2014년 6·4 지방선거 경남 지역 여성후보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2권 제1호, 47-99쪽.
- 이현우. 2015. “2014년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친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제1호, 247-268쪽.
- 조희원. 2011.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와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 『평화학연구』, 제12권 제4호, 241-263쪽.
- 정다빈·김기동·이정희. 2017.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당선경쟁력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권 제3호, 51-73쪽.
- 황아란. 1998.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163-186쪽.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1호, 203-222쪽.
- 황아란. 2006. “2006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충원.”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51-79쪽.
- 황아란·서복경. 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1권 제1호, 99-128쪽.
- 황아란. 2013.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5호, 277-295쪽.
- 황아란. 2014. “2014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319-341쪽.
- 황아란. 2015a. “한국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이현우·남봉우 편, 서울: 오름.
- 황아란. 2015b.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3-26쪽.
- 황아란. 2016. “역대 지방선거의 통시자료 분석을 통한 2014년 동시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287-305쪽.
- Celis, Karen. 2008. “Gendering Representation,” G. Goertz and A. Mazur(eds.), *Politics, Gender, and Concep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lds, S. and J. Lovenduski. 2013. "Political Representation." G. Waylen, K. Celis, J. Kantoal and S. L. Weldon(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Childs, Sarah and Mona Lena Krook. 2009. "Analysing Women's Substantive Representation: From Critical Mass to Critical Actors,"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44, No.2, pp.125-145.
- Dahlerup, Drude. 1988. "From a Small to a Large Minority: Women in Scandinavian Politic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11, No.4, pp.275-298.
- Farrell, David M. 2001. *Electoral Systems*, N.Y.: Palgrave.
- Lawless, Jennifer L, and Richard L. Fox. 2005. *It Takes a Candidate: Why Women don't Run for Offi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and Joni Lovenduski. 1995. *Political Recruitment, Gender and Class in the British Parli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illips, Anne. 1995. *The Politics of Presenc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Gender, Ethnicity, and Ra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itkin, Hanna Fenichel.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nsbridge, Jane. 1999. "Should Blacks Represent Blacks and Women Represent Women? A Contingent 'Y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61, No.3, pp.628-657.
- Young, Iris Marion.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Higher-level Local Councils and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2014 Local Election

Kang, Yee Eun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Hwang, Ah Ran

(Dept. of Public &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Women in the Korean councils at the national as well as the local levels are disproportionately underrepresented. The percentage of women in higher-level local councils is very low, in particular. This study, noting that the women's representation heavily relies o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alyz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electoral success in the higher-level local council election in 2014. It finds that gender is not the factor with the other variables being controlled. The empirical analysis of electoral success shows that gender has no significant effec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are politic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y, regionalism, and incumbency. Thus, the reason of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local councils should be examined in parties, which nominate few women candidates. This study highlights parties' strategies for increas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Key words:** Women's Representation, local councils, local elections, political party nomination, electoral competitiveness

┃ 투 고 일 : 2018년 3월 10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3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4월 9일